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5)

- 사회경제적 불평등 : 형평성 지표 -

제목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5)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02-6262-2106
홈페이지 www.pcnc.go.kr
대표집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고동현 박사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ISSN 2383-5273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의견임.

목 차

I. 개요	1
1. 분석 배경	1
2. 분석 범위와 목적	1
II. 형평성 지표 분석	3
1. 소득없는 성장	3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9
3.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13
4. 성별 격차(Gender Gap)	16
5. 자산 불평등의 심화	20
6. 소비생활의 격차	25
7. 교육 격차	28
8. 사회 이동성 약화	37
III. 정책적 시사점	42
1. 사회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문제점	42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44

I. 개요

1. 분석 배경

- 오늘날 소득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배후에는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 해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
- 소득분배 악화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은 국민통합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소득불평등과 빈곤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사회갈등의 구조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최근 사회갈등은 소득분배 악화, 새로운 빈곤문제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성별격차, 교육격차, 계층구조화 등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
- 따라서 분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임

2. 분석 범위와 목적

- 형평성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공정한 분배’와 ‘균등한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임
- 형평성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사회’에 관한 것으로, 형평성이 낮다면 자원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삶의 기회가 차단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정성 인식이 훼손되고 사회적 불만과 생활상의 불안이 팽배하게 돼 결국 통합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형평성은 경제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포함하지만 이보다는 다차원적인 개념
 - 소득분배를 비롯해 연령, 지역, 성별에 따른 불평등 양상과 더불어 고용, 교육, 주거와 자산, 소비생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에 초점
-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은 소득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됨
- 본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득 없는 성장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령화와 노인빈곤, 성별격차, 자산불평등, 소비생활 분화, 교육격차, 사회이동성 수준 등 다양한 영역의 형평성 지표 분석을 통해 오늘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자 함
-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OECD 형평성 지표

- OECD는 형평성 지표로 소득불평등, 상대적 빈곤, 아동빈곤, 노인소득, 물자부족, 빈곤지속, 세대간 이동성, 주택비용, 저임금고용, 성별 임금격차 등을 제시
- 나아가 형평성 지표에 현재의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뿐만 아니라, 이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활동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es)도 포함
- 사회적 대응 지표로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민간사회복지지출, 최소소득 기준, 급여수급자, 노령연금대체율, 연금약정 등을 제시

II. 형평성 지표 분석

1. 소득없는 성장

-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성장-분배-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면서 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과거처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특히 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과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소득 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이와 관련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가계소득 비중 감소

- 최근 들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가계소득 증가율이 국민총소득(GNP) 증가율보다 낮아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72.9%에서 2012년 62.3%로 10.6%p 하락
- 특히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고, 세계금융위기 이후 더욱 축소
- 기업소득 증가율과 비교하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남
- 1992년에서 2012년 기간 중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국민총소득 증가율 8.2% 보다 낮은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10.1%로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서 2012년 사이의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가계소득 증가율(5.8%) 보다 높게 나타남

【 국민총소득(GNP) 대비 가계소득 비중 추이, 1992~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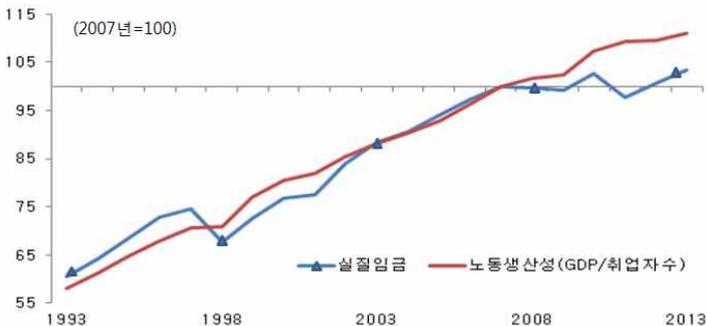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조주현(2014), 민간소비 지표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4.8. 인용

2) 생산성과 실질임금 격차 확대

- 최근 들어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추이, 1993~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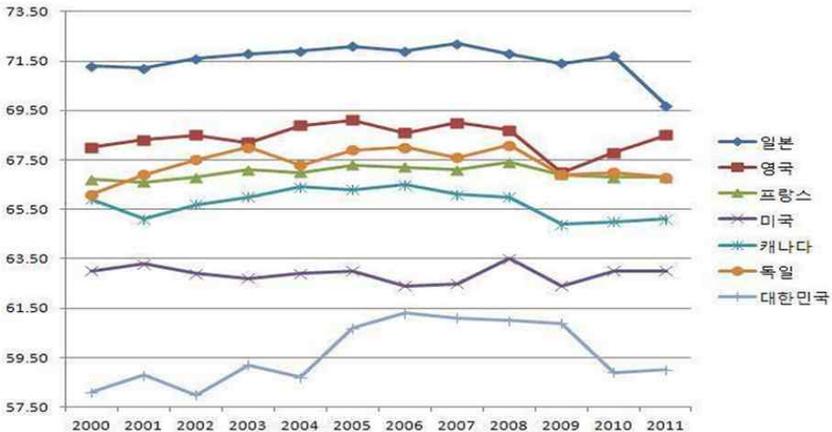
출처 : 박종규(2014), 낙수효과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4. 8.

- 2008년 이후 평균 노동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생산성 증대가 곧바로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의 역설적 현상을 보여줌

3) 노동소득의 낮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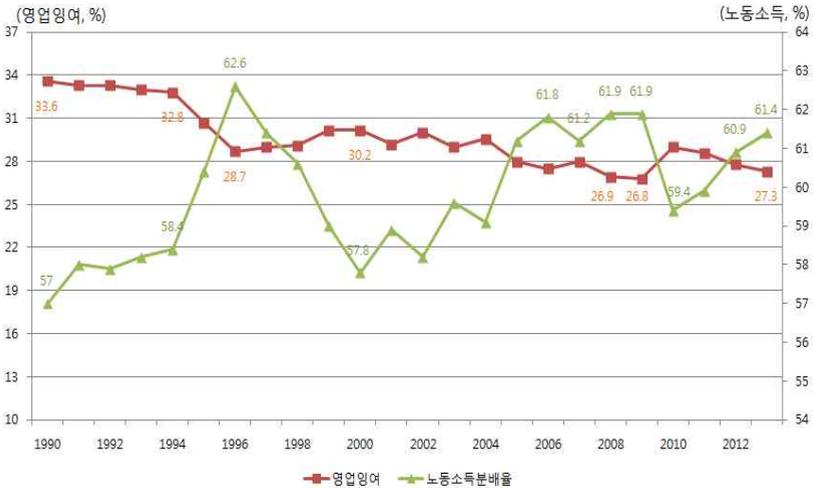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전체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2013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1.4%를 기록,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때 크게 상승했으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0년 57.8%까지 떨어졌고, 이후 2006년 61.8%까지 상승했지만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시 하락해 2010년 59.4%까지 낮아짐

【 OECD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2000~2011 】



- 기업의 자본소득분배율(영업이익)은 1990년 이래 다소 하락하여 2013년 27.3%로 나타났지만, 최근 하락폭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추세에 비해 크지 않음
- 특히 경제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 것과 달리, 자본소득분배율은 경제위기 시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대체로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과 영업이익 추이, 1990~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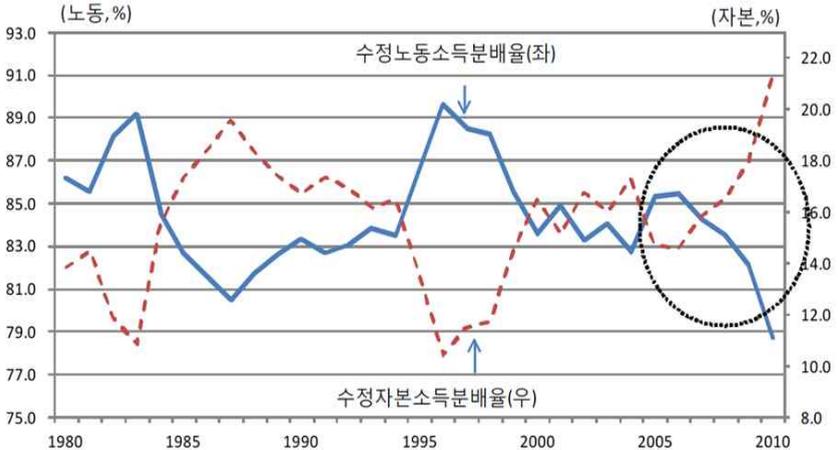
주 : 노동소득분배율=(피고용자보수+영업이익)/피고용자보수*100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원자료, 각 년도

- 자영업자 소득을 포함하는 수정노동소득분배율과 수정자본소득분배율 격차를 보면 최근 점차 확대 추세에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소득(영업이익)에 포함.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실보다 낮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자영업자 소득을 포함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수정할 경우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하는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외환위기 때 크게 상승하였으나 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2006년 85.4%까지 상승한 이래 계속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78.7%까지 떨어짐
- 반면 수정자본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낮아졌으나, 다시 회복되었다가 2006년 이후 최근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2006년 이후 수정노동소득분배율과 수정자본소득분배율의 격차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는 기업이윤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곧 노동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의미를 의미

【 수정자본소득분배율과 수정노동소득분배율 】



주 : 수정노동소득분배율= (피고용자보수+자영업자소득)/요소비용국민소득(NI)

출처 : 조운제 외(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

4) 고용없는 성장

- 기업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소득의 비중이 낮고, 생산성 증가에 비해 실질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근 지적되는 ‘고용없는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 증가율도 저조한 ‘저성장 경제,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상황
 - 한국경제의 고용탄력성(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 급락,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
 - 외환위기 이전 고용탄력성(1984~1997년, 0.350)은 그 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1998년~2008년에 0.311로 크게 하락하였고, 2009년~2012년에는 0.290으로 더 낮아진 상황

【 기간별 고용탄력성 추이, 1970~2012 】



주 : 고용탄력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 주원백(2012), '경제구조 혁신이 고용창출 근원,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인용

-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고용창출이 어렵고 실질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되는 ‘성장의 한계’ 또는 ‘저성장의 문턱’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음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적인 점은 대기업 부문이나 정규직 근로자 등 1차 노동시장 근로자와 영세사업체 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2차 노동시장 근로자로 분절화되어 있다는 점
-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기회, 취업기간, 임금 등에서 안정적 조건과 기회를 보장받는 반면, 중소기업 부문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로부터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위 10% 계층의 근로소득에 비해 상위 10%의 근로소득이 4.7배로 나타남
 - 이 같은 임금격차는 OECD 33개국 중 30위 수준
 -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이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미국, 이스라엘, 터키, 칠레 등이 임금격차가 큰 국가에 속함

1) 비정규직 문제

- 2002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 2013년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2.3%를 차지
 -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절반이 다소 넘는 수준(2013년 56.6%)
 -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체되거나 다소 하락해 최근 임금격차가 더 벌어짐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수준, 2003~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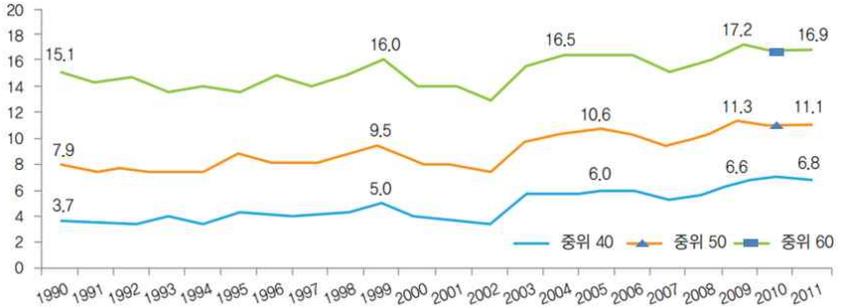


주 :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각 년도

-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의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정규직 대비 54.6%로 크게 하락한 후 나아지지 않는 실정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2003년 61.3%에서 2004년 65%로 증가하며 간극을 좁히다가 2009년 54.6%로 하락
 - 이후 2012년 5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3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문제로, 외환위기 이후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문제가 대두
 - 중위소득 50% 기준 근로빈곤층 규모는 11.1%(2011년)
 -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5%보다 1.6%p 높은 수준으로 현재의 근로빈곤층 규모가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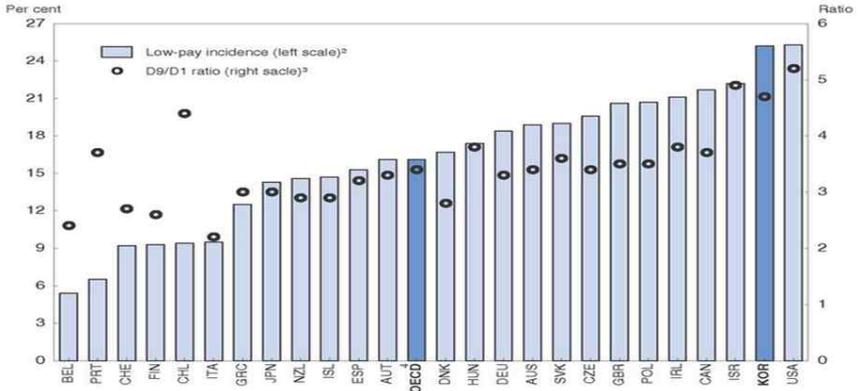
- 근로빈곤층의 발생은 저임금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음

【 근로빈곤층 추이, 1990~2011 】



주 :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취업빈곤층. 빈곤선은 제곱근으로 균등화된 경상소득의 중위 값 활용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노대명(2013), 근로빈곤층 실태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

【 OECD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12(또는 최근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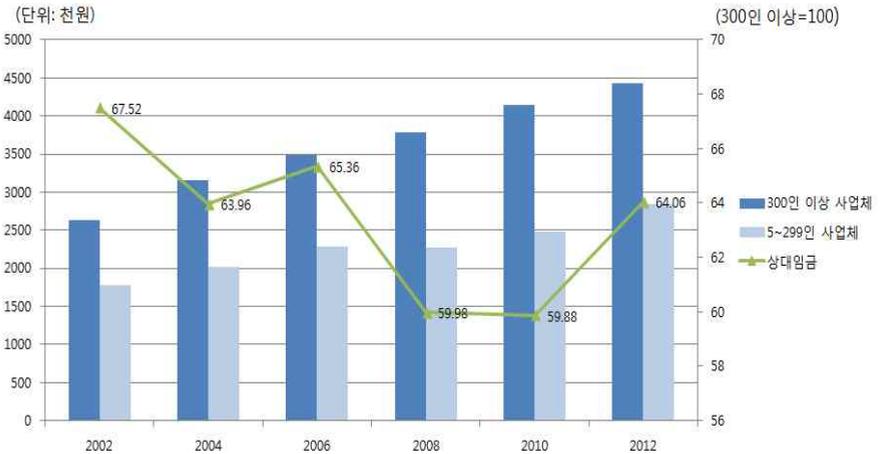


출처 : OECD Earnings Distribution Database; OECD(201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6. 인용

2) 기업규모별 격차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임
 - 2012년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4.1%에 그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2008~2009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특히 심화되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이 삭감되었다가 회복되는 추세인 데 반해 대기업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격차, 2002~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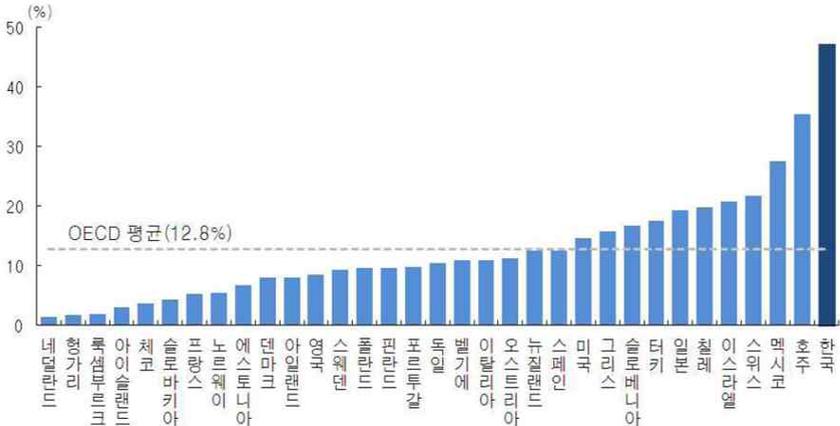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각 연도

3.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60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이 1990년 15.2%에서 2001년 19.3%, 2010년 25.3%로 증가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높은 빈곤율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의 거의 절반 정도(48.4%, 2013년)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
 - 전체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14.6%인데 비해,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가깝다는 것은 노인층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의미
 - 이러한 상황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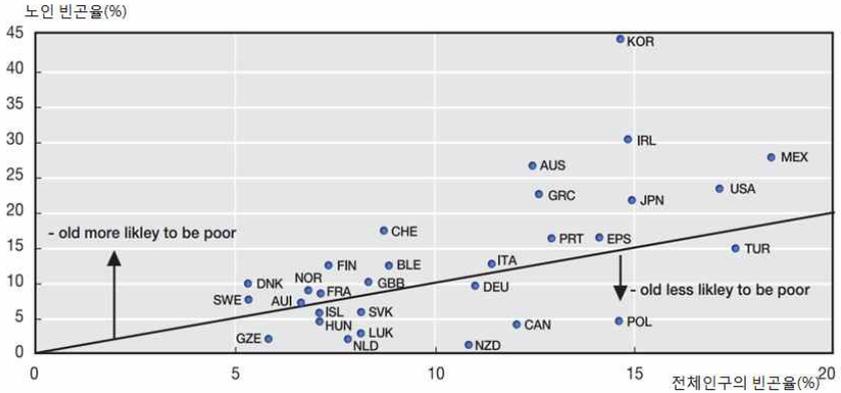
【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 2013 】



주 : 노인 상대적 빈곤율(%) :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비율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6.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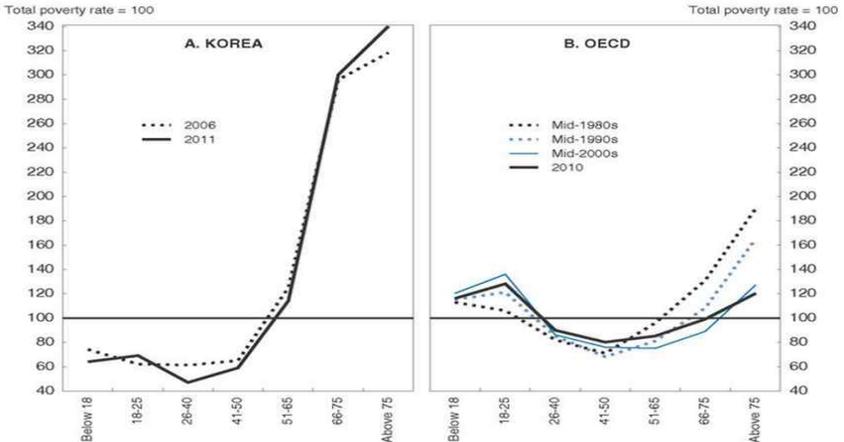
-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큼

【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00년대 중반 】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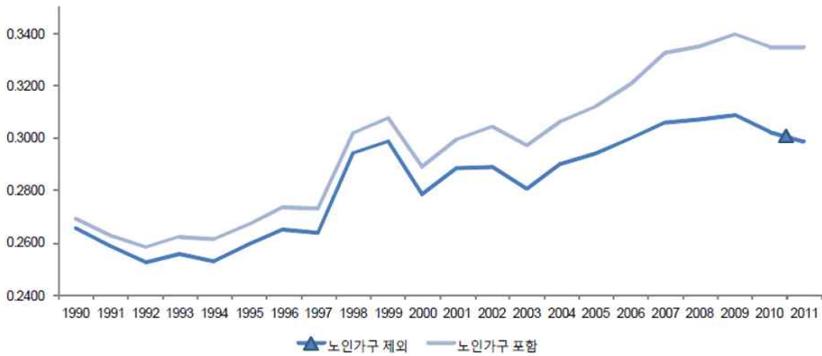
【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비교 】



출처 : OECD(2014),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6. 인용

- 특기할만한 점은 노인가구 포함 여부에 따라 지니계수 변동 폭이 커진다는 사실
 - 노인을 포함한 지니계수는 노인을 제외했을 때의 지니계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인 빈곤문제가 불평등 심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그 변동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볼 때, 노인 빈곤이 더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노인가구 포함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비교, 1990~2011 】



출처 : 김미숙 외(2012),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성별 격차(Gender Gap)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를 보면, 한국의 성별격차 수준은 0.64로 세계 142개국 중 117위를 차지해 양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줌

【 성별격차 작은 국가 】

Country	Rank	Score
Iceland	1	0.8594
Finland	2	0.8453
Norway	3	0.8374
Sweden	4	0.8165
Denmark	5	0.8025
Nicaragua	6	0.7894
Rwanda*	7	0.7854
Ireland	8	0.7850
Philippines	9	0.7814
Belgium	10	0.7809
Switzerland	11	0.7796
Germany	12	0.7780
New Zealand	13	0.7772
Netherlands	14	0.7730
Latvia	15	0.7691
France	16	0.7588
Burundi	17	0.7565
South Africa	18	0.7527
Canada	19	0.7464
United States	20	0.7463
Ecuador	21	0.7455
Bulgaria	22	0.7444
Slovenia	23	0.7443
Australia	24	0.7409
Moldova	25	0.7405
United Kingdom	26	0.7383
Mozambique	27	0.7370
Luxembourg	28	0.7333
Spain	29	0.7325
Cuba	30	0.7317
Argentina	31	0.7317
Belarus*	32	0.7300
Barbados	33	0.7289
Malawi	34	0.7281
Bahamas	35	0.7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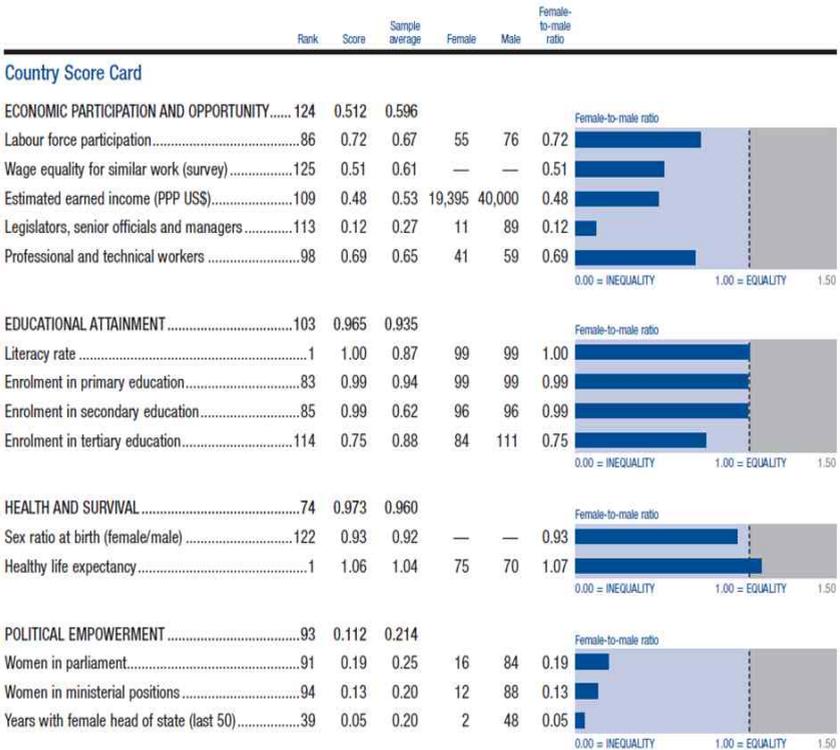
【 성별격차 큰 국가 】

Country	Rank	Score
Burkina Faso	110	0.6500
Liberia*	111	0.6461
Nepal	112	0.6458
Kuwait	113	0.6457
India	114	0.6455
United Arab Emirates	115	0.6436
Qatar	116	0.6403
Korea, Rep.	117	0.6403
Nigeria	118	0.6391
Zambia	119	0.6364
Bhutan	120	0.6364
Angola	121	0.6311
Fiji	122	0.6286
Tunisia*	123	0.6272
Bahrain	124	0.6261
Turkey	125	0.6183
Algeria	126	0.6182
Ethiopia	127	0.6144
Oman	128	0.6091
Egypt	129	0.6064
Saudi Arabia	130	0.6059
Mauritania	131	0.6029
Guinea*	132	0.6005
Morocco	133	0.5988
Jordan	134	0.5968
Lebanon	135	0.5923
Côte d'Ivoire	136	0.5874
Iran, Islamic Rep.	137	0.5811
Mali	138	0.5779
Syria	139	0.5775
Chad	140	0.5764
Pakistan	141	0.5522
Yemen	142	0.5145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참여와 기회 수준은 0.512로 124위, 교육성취는 0.965로 103위, 건강과 기대수명 수준은 0.973으로 74위, 정치적 권한은 0.112로 93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경제적 참여와 기회 수준에서 남녀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점수로 평가할 때 정치적 권한 점수도 매우 낮아 정치적·경제적 성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교육성취와 건강수준의 성별 격차의 경우 순위는 낮지만 점수로는 비교적 평등한 수준으로 나타남(각각의 점수가 0.965, 0.973으로 완전 평등 수준인 1에 가까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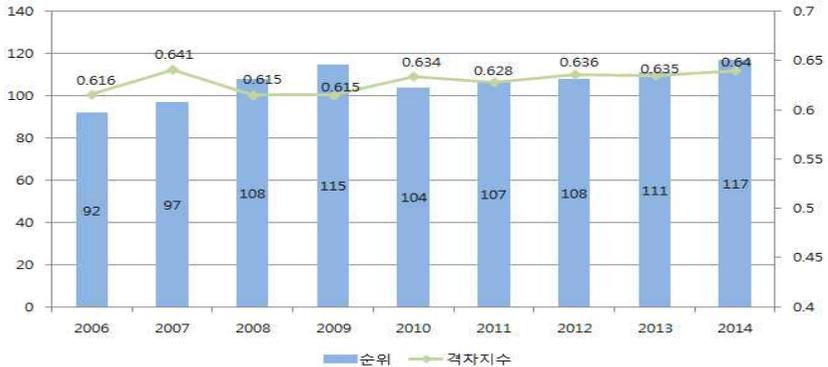
【 한국의 성별격차 분야별 수준 】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 성별격차지수 순위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2006년 92위(115개국 중)에서 2014년 117위로 점차 하락
- 성별격차지수 점수를 기준으로, 2000년 0.565에서 2014년 0.64로 다소 개선(+0.0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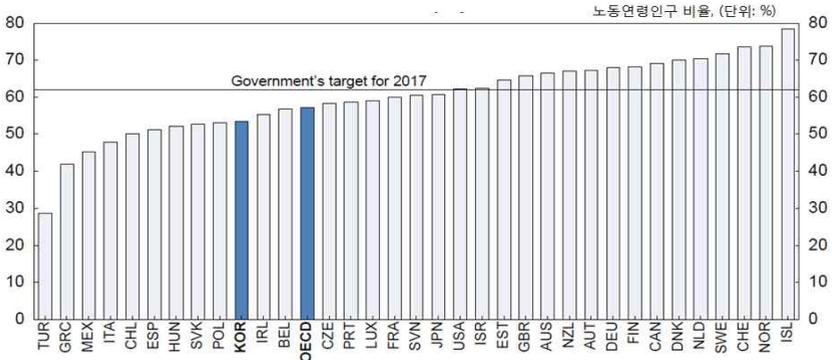
【 한국의 성별격차지수 추이, 2006~2014 】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원자료 활용

- 경제적 기회 측면에서 성별격차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인구 대비 여성고용율은 2014년 9월 현재 54.4%로 OECD 중 하위권

【 OECD 국가의 여성고용률, 2012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6. 인용

-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2013년 6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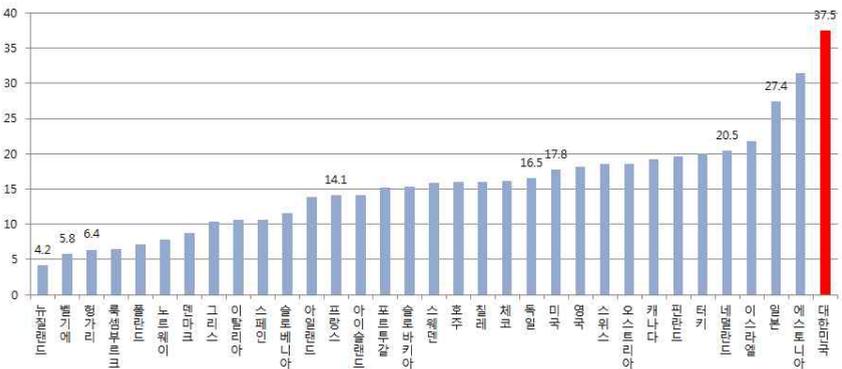
【 성별 임금격차 추이, 2006~2013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 성별 임금격차는 OECD 34개국 중 가장 큰 수준
- 임금격차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벨기에,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순

【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2011(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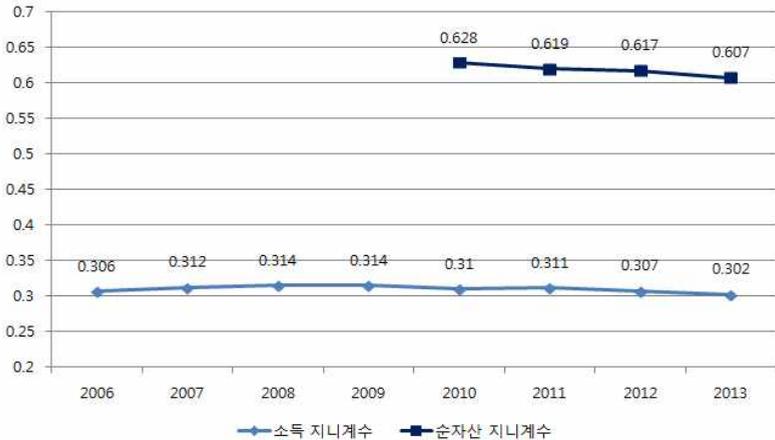


주 : 성별 임금격차 = (남성 중위소득-여성 중위소득)/남성 중위소득*100
 프랑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의 경우 2010년 자료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원자료 활용

5. 자산 불평등의 심화

- 우리 사회는 자산분배 불평등 정도가 소득분배 불평등보다 더 큰 특징을 보임
- 근래 들어 자산 소유 여부가 계층격차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 됨. 특히 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유무, 규모, 가격, 공간 등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계층 간 위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
- 자산불평등 측면을 보면 자산 지니계수는 2013년 0.607로 소득 지니계수 0.302에 비해 매우 높은데, 소득불평등에 비해 자산불평등 정도가 두 배 가량 크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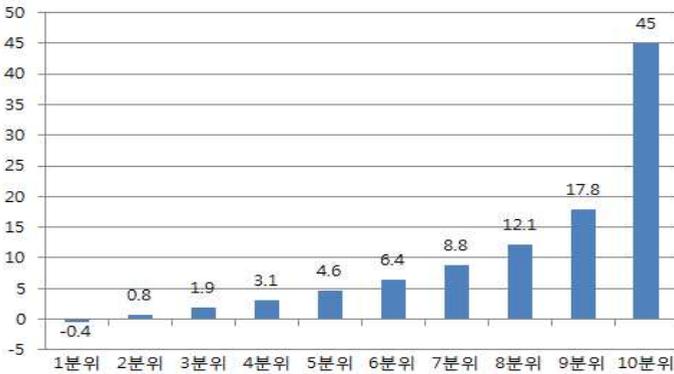
【 순자산 지니계수와 소득 지니계수 비교, 2006~2013 】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순자산 지니계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 지니계수), 각 연도

- 2013년 10분위별 순자산점유율을 보면 10분위 계층의 경우 45.0%를 차지한 반면, 하위계층의 경우 1분위 계층은 -0.4%, 2분위 계층은 0.8%로 매우 낮은 수준
- 이러한 소득 상위계층(10분위)의 자산점유율은 소득점유율 22.3%(통계청, 2013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두 배 수준

【 10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2013 】



출처 : 통계청(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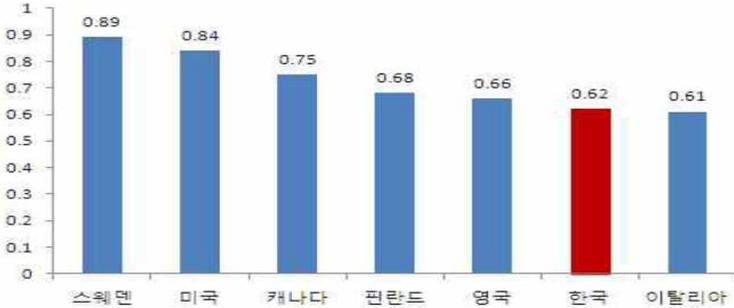
【 5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2013 】



출처 : 통계청(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서

- OECD 대부분 국가들도 통상 소득 불평등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의 순자산 지니계수, 2011 】



출처 : 한국은 통계청(2011), 가계금융조사 OECD(2008), Growing Unequal?, 각국 원자료는 1990s말~2000s초반 자료

【 OECD 주요국의 순자산 10분위 점유율(%), 2011 】



출처 : 한국은 통계청(2011), 가계금융조사 OECD(2008), Growing Unequal?, 각국 원자료는 1990s말~2000s초반 자료

-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불평등 정도(지니계수 0.7)가 금융자산 불평등도(0.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달리 OECD 주요국은 반대로 금융자산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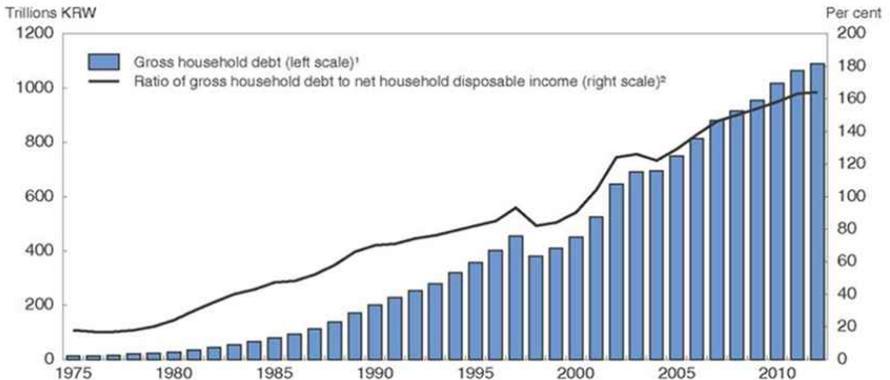
【 OECD 주요국 자산 지니계수의 구성 】

국가	순자산	총자산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캐나다	0.75	0.63	0.86	0.62
핀란드	0.68	0.58	0.80	0.57
이탈리아	0.60	0.58	0.73	0.60
일본	0.71	0.59	0.72	0.63
스웨덴	0.89	0.67	0.78	0.70
영국	0.67	0.58	0.80	0.57
미국	0.84	0.74	0.91	0.70
한국	0.63	0.61	0.64	0.70

출처 : 한국은 통계청(2011), 가계금융조사 OECD(2008), Growing Unequal?, 각국 원자료는 1990s말~2000s초반 자료

-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부담을 늘려 생활수준 하락과 빈곤의 증가를 낳는 요인이 됨
 - 가계부채는 2013년 전체 규모가 980조원, 가구의 평균부채는 5,818만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7%(통계청,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13)
 -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가 심각한 부담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 1975~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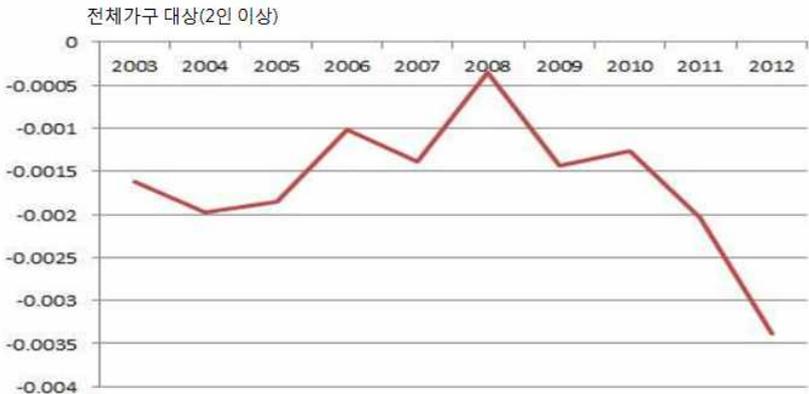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OECD(2014), Economic Surveys Korea, 2014.6. 인용

● 가계부채는 소득분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 이자상환부담금을 제외하고 두 지니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자상환금을 제외한 유효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자상환부담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남을 보여줌
- 즉, 이자상환부담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가계부채가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정적 영향이 보다 확대되고 있음

【 가계부채의 가계소득 영향, 2003~2012 】



주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 유효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측정값

유효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이자상환부담금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3), 가계부문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3. 12.

6. 소비생활의 격차

- 소득분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소비, 문화의 불평등으로 전이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득분배의 불균등성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생활양식의 선택기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초래함
- 최근에는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규모 및 소비패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격차가 소비생활의 격차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 소득 상위계층(5분위)의 가계 소비지출규모는 월평균 382만원 수준인 반면, 하위계층(1분위)의 소비지출은 126만원으로 1/3 수준에 그침
-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크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큼
 - 그 밖에도 오락문화 지출 비용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 상위계층(5분위)은 6.7%인데 비해 하위계층(1분위)은 4.2%에 그침

【 가구 소득분위별 지출항목 비중, 2013 】

전체가구대상(2인이상), %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식료품, 비주류음료	20.7	15.8	14.4	13.0	11.5
주류, 담배	1.7	1.5	1.3	1.0	0.8
의류, 신발	4.8	6.1	6.7	7.1	7.8
주거, 수도, 광역	16.5	12.9	11.1	9.7	8.3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3.5	3.6	3.7	3.8	4.8
보건	10.3	6.6	6.4	6.0	6.0
교통	9.5	10.8	11.3	13.8	13.8
통신	6.7	7.2	6.8	6.0	5.1
오락, 문화	4.2	4.7	5.3	5.6	6.7
교육	6.1	10.0	11.0	12.7	13.2
음식, 숙박	9.8	13.1	13.6	13.4	12.9
기타상품, 서비스	6.3	7.6	8.3	8.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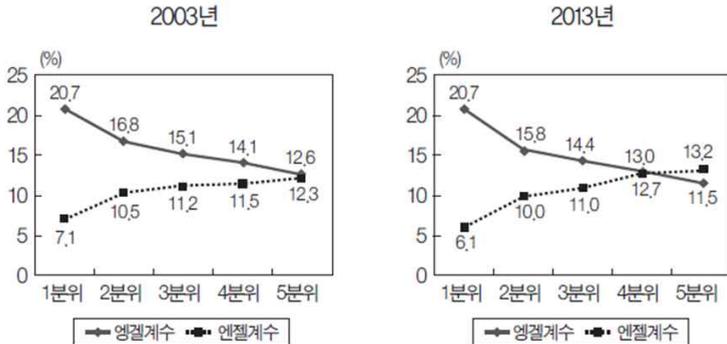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커 '엔젤계수'가 높게 나타남
 - 식료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을 소비해야 되므로, 소득이 높아지면 엔젤계수는 하락하고 소득이 낮아지면 엔젤계수가 올라가는 경향을 띠
-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커 '엔젤계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 전체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식료품비 지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층일수록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지출보다 교육비 지출을 더 늘렸음을 알 수 있음

※ '엔젤계수(Engel's coefficient)는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는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 저소득층의 경우 식료품비와 교육비 지출의 비중 차이가 큰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그 차이가 작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엔젤계수와 엔젤계수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 분위별 엔젤계수와 엔젤계수 비교, 2003, 2013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박문수 외(2014),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인용

- 한편, 2003~2013년 동안의 가계 소비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식료품비 지출비중은 다소 감소한 데 비해, 교육비 지출 비중은 증가·유지하면서 앵겔계수와 엔젤계수 차이가 더욱 좁아지는 양상
- 다만, 소득 최하위층(1분위)의 경우는 예외

7. 교육 격차

- 교육격차는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계층 구조화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
- 최근 추세를 보면 사회 전체적인 교육기회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차별화되고 있음
- 교육은 그 동안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아왔지만, 이제는 교육의 양적 확대가 교육의 평등으로 이어지거나 빈곤의 세대 간 재생산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사교육 비중이 큰 교육체제에서 사교육을 매개로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기존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임

1)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수준

- 이와 관련 우선 교육기회 충족 여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가구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가 확인
- 세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기회가 충족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교육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2012년의 경우 가계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68.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교육기회가 충족되고 있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
-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교육 격차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계층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함

【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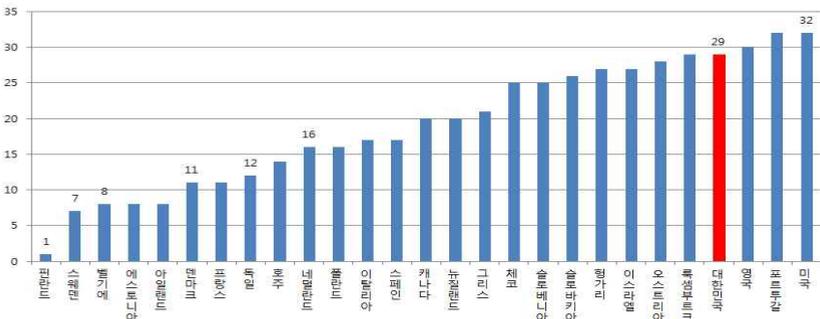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100만원 미만	21.5	78.5	26.3	73.7	26.0	74.0
100~200만원 미만	33.5	66.5	39.6	60.4	40.0	60.0
200~300만원 미만	40.9	59.1	46.3	53.7	49.5	50.5
300~400만원 미만	47.9	52.1	52.4	47.6	54.4	45.6
400~500만원 미만	54.2	45.8	57.9	42.1	57.7	42.3
500~600만원 미만	58.9	41.1	59.7	40.3	62.8	37.2
600만원 이상	62.7	37.3	67.3	32.7	68.4	31.6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2008, 2010, 2012)

2) 소득수준과 교육의 상관성

- 교육은 소득과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한국은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
 -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덴마크 순으로 교육수준별 임금격차가 낮게 나타난 반면, 미국, 포르투갈, 영국, 한국 등은 임금격차가 높은 국가군에 해당

【 교육수준별 임금격차, 2012 】



주 : 교육수준별 임금격차: (중등교육 집단의 평균소득-중등교육 미만 집단의 평균소득)/중등교육 집단의 평균소득*100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우리 교육체제에서 특징적인 점은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크고, 나아가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학업성취도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임
-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가구소득 수준별로 사교육비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됨
 -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5천원이나,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6만 8천원으로 6.26배 차이
 -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600만~7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84.8%, 700만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이 83.5%로 높은 반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1.3%에 불과함

【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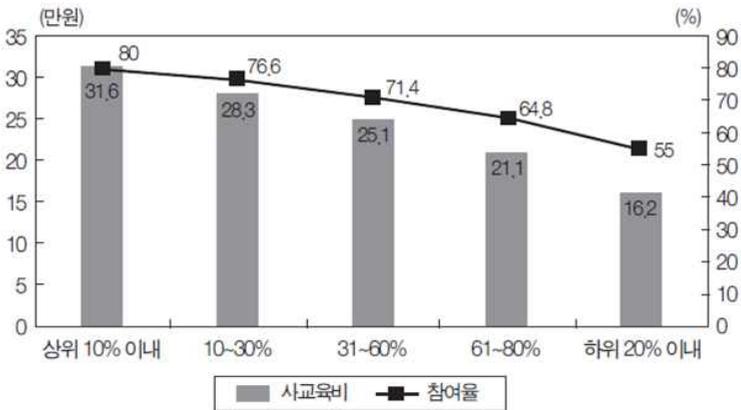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2014), 2013 사교육비 조사결과

- 문제는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참여율이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임

- 2013년 성적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현황을 보면, 성적이 상위에 속할수록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 6천원인 반면, 하위 20% 이내 학생은 16만 2천원으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고, 참여율도 상위 10% 학생은 80%가 참여하나, 하위 20% 학생은 55%로 낮음

【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013 】



출처 : 통계청(2014), 2013 사교육비 조사결과

-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연관성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계층은 사교육비 지출이 크고 이에 따라 수능성적도 좋은 점수를 받는 반면, 소득 하위계층은 수능점수가 대체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 6분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수준, 사교육비, 수능성적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규모, 학업성취도의 상관성을 짐작케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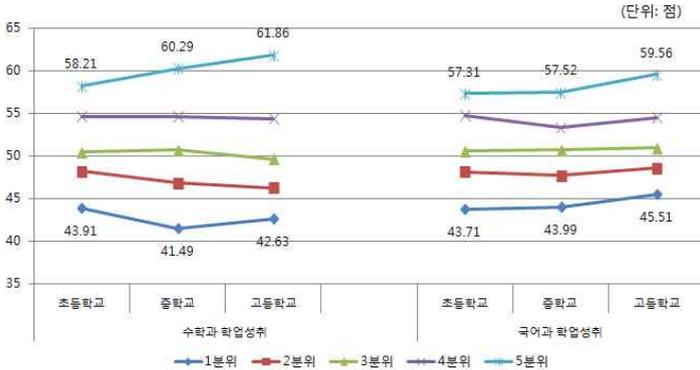
【 소득분위별 사교육비와 수능 주요 영역 점수 】



출처 : KDI(2012); 한국개발연구원 외(2013),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2013.8. 인용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회 및 교육성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중·고생의 국어, 수학 등 성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0% 계층과 상위 20% 계층 학생의 수학 성취도 점수는 초등학교 14.3점, 중학교 18.8점, 고교 19.2점 차이가 확인
 - 반면, 국어 점수는 초등학교 13.5점, 중학교 13.5점, 고교 14.1점 차이로, 수학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 벌어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 】



주 : 2003~2011년 전국 초중고교 학생 4만123만 명 대상 추적 조사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2),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원자료 활용

- 소득과 학업수준의 차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대학 진학률에서도 확인 가능
 - 4년제 대학 진학률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1분위 계층과 10분위 계층을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
 - 30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약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9위권 대학 및 의대의 경우 1분위는 0.8%, 10분위는 13.8%로 약 17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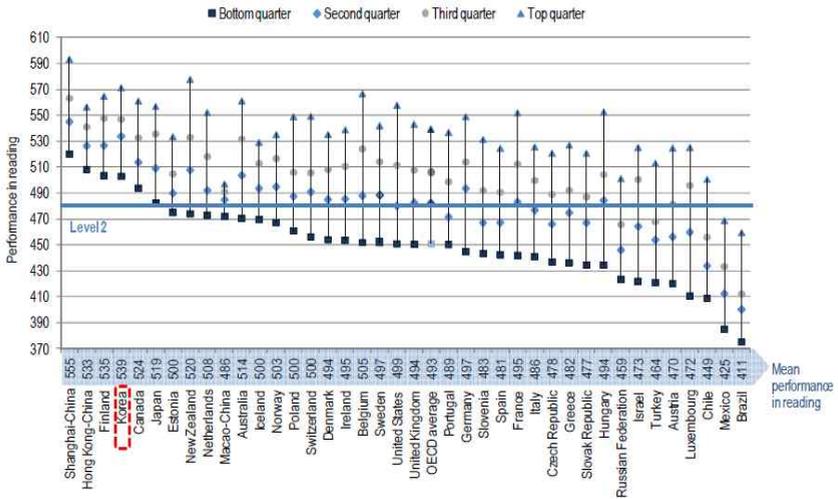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 대학 진학률 】

사회경제적 분위	수능 등급	4년제 대학(%)	30위권 대학(%)	9위권 대학 및 의대(%)
1분위	5.6	33.8	2.3	0.8
2분위	5.4	45.7	6.3	0.0
3분위	5.6	34.2	3.8	2.5
4분위	5.7	49.3	6.7	0.7
5분위	5.8	52.2	5.9	0.0
6분위	5.5	61.3	10.2	0.7
7분위	5.2	74.3	14.9	5.0
8분위	4.9	64.7	13.4	2.5
9분위	4.8	75.8	14.8	6.3
10분위	4.3	74.5	23.4	13.8

주 : 한국고용패널조사 자료 활용, 2004년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1731명의 2008년도 대학 진학성과 추적 조사
출처 : 김영철(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PISA 평가 읽기점수의 경우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4위)으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기초 해독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학생의 점수 차이도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OECD 국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 관계, 2009 】



주 : 학업성취도(PISA 읽기점수) 순으로 국가별 배치, Level 2 기준선은 기초 해독률 수준을 의미
 각 국가별 선분의 길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사이의 읽기점수 차이를 나타냄
 출처 : PISA 2009 Results; OECD(2012),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학생의 학업성취도(PISA 읽기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11.0%로 영향력이 작은 수준
- OECD 34개국 중에서는 헝가리가 26%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가 6.2%로 가장 작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읽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 2009 】

순위	국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순위	국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	헝가리	26.0	18	영국	13.7
2	벨기에	19.3	19	스페인	13.6
3	터키	19.0	20	스웨덴	13.4
4	칠레	18.7	21	네덜란드	12.8
5	룩셈부르크	18.0	22	호주	12.7
6	독일	17.9	23	이탈리아	12.6
7	미국	16.8	24	그리스	12.5
8	프랑스	16.7	25	이스라엘	12.5
9	오스트리아	16.6	26	체코	12.4
10	뉴질랜드	16.6	27	이탈리아	11.8
11	포르투갈	16.5	28	한국	11.0
12	폴란드	14.8	29	캐나다	8.6
13	슬로바키아	14.6	30	일본	8.6
14	덴마크	14.5	31	노르웨이	8.6
15	멕시코	14.5	32	핀란드	7.8
16	슬로베니아	14.3	33	에스토니아	7.6
17	스위스	14.1	34	아이슬란드	6.2

주 : 원자료는 2009 PISA 읽기점수, 조사대상은 만 15세 학생, 자기보고 방식

출처 : PISA 2009 Results;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의 교육지표, 2013. 12. 인용

- 그러나, 학습과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포섭지수는 74.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OECD 33개국 중 21위로 중하위권)
- 사회적 포섭지수가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91.2%), 핀란드(89.2%), 스웨덴(85.7%),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순

- 사회적 포섭은 사회경제·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 학습하는 통합적 학교교육 체제를 지향

【 OECD 국가의 사회적 포섭 지수, 2009 】

순위	국가	사회적포섭지수	순위	국가	사회적포섭지수
1	노르웨이	91.2	18	독일	76.0
2	핀란드	89.2	19	체코	75.1
3	스웨덴	85.7	20	슬로베니아	75.0
4	스위스	85.4	21	한국	74.1
5	덴마크	83.6	22	이탈리아	73.9
6	아이슬란드	82.8	23	룩셈부르크	73.3
7	캐나다	82.4	24	폴란드	73.3
8	영국	81.6	25	포르투갈	73.2
9	에스토니아	81.5	26	미국	70.7
10	뉴질랜드	78.9	27	벨기에	69.8
11	일본	78.2	28	오스트리아	69.2
12	스페인	77.1	29	그리스	68.0
13	아일랜드	76.7	30	터키	63.5
14	이스라엘	76.7	31	멕시코	56.2
15	슬로바키아	76.6	32	헝가리	54.2
16	호주	76.4	33	칠레	48.6
17	네덜란드	76.2			

주 : 사회적 포섭지수(index of social inclusion): 학교 내에서 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대한 PISA 지수의 변동 비율

출처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2013), 한국의 교육지표, 2013. 12. 인용

8. 사회 이동성 약화

-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은 계층의 재생산 내지는 불평등의 구조화 양상을 나타내는 지표
-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과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국민통합 정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반대로 사회이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특정 시점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지위가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계층상승의 희망이 사라지고 계층간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쌓여가 국민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최근 한국 사회의 경우 사회이동성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 보임
 -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아 왔지만, 소득계층간 이동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동성도 최근에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이동성은 ‘세대내 이동성’과 ‘세대간 이동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세대내 이동성은 개인의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계층이동을 뜻함
 - 세대간 이동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에게 대물림 되는 정도를 보여줌
- 우선 세대내 계층이동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득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 저소득층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기간(7차→8차) 동안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머물러 있는 비율이 76.6%인데 비해,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23.5%에 불과

- 저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을 유지할 가능성은 2005년에서 2006년 기간(1차→2차)에 68.3%였던 것이 2011년에서 2012년 기간(7차→8차)에 76.6%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반면에 저소득층에서 탈출하여 중산층 및 고소득층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줄어들. 특히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는데, 2.53%(1차→2차)에서 0.48%(7차→8차)로 낮아짐
- 중산층의 경우 중산층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76.0%(1차→2차)에서 79.0%(7차→8차)로 약간 높아짐
- 고소득층 가구가 고소득층을 유지할 가능성은 76.7%(1차→2차)에서 83.8%(6차→7차)로 높아졌다가, 75.5%(7차→8차)로 다소간 하락

【 소득계층별 동태적 변화(%) 】

이전상태	이후상태	1차→2차	2차→3차	3차→4차	4차→5차	5차→6차	6차→7차	7차→8차
저소득층	저소득	68.29	73.81	70.21	71.65	75.76	71.42	76.55
	중산	29.18	25.04	28.68	26.92	23.97	27.80	22.97
	고소득	2.53	1.15	1.11	1.43	0.27	0.78	0.48
중산층	저소득	10.62	12.04	9.82	9.76	10.07	7.15	10.02
	중산	76.00	80.26	81.12	82.04	81.23	80.66	79.03
	고소득	13.38	7.70	9.06	8.20	8.69	12.19	10.95
고소득층	저소득	1.96	0.70	2.20	1.21	0.47	0.92	0.48
	중산	21.30	25.17	25.27	22.96	23.97	15.25	24.06
	고소득	76.74	74.13	72.53	75.83	75.56	83.83	75.46

주 : 1) 한국복지패널 1~8차에 모두 응답한 5,015가구 대상

2) 1차 복지패널조사 2005년, 2차 2006년, 3차 2007년, 4차 2008년, 5차 2009년, 6차 2010년, 7차 2011년, 8차 2012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복지패널분석보고서

- 빈곤탈출률이 감소 추세라는 사실은 ‘반복 빈곤’과 ‘장기 빈곤’에 따라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산층 진입이 점차 어려워짐을 의미함 ※ 빈곤탈출률은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율을 말함

- 빈곤탈출률은 2006년 31.7%에서 2012년 23.5%로 크게 줄어들었음
- 2006년 31.7%, 2007년 26.2%, 2008년 29.8%, 2009년 28.4%, 2010년 24.2%, 2011년 28.6%, 2012년 23.5%로 다소 등락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세대간 계층이동성을 살펴보면, 임금을 기준으로 한 세대간 대물림 비율은 32.3%를 나타냄
 - 아버지의 경제적 지위가 아들에게로 이전되는 비율은 1분위 계층에서는 36%, 2분위는 27%, 3분위는 29%, 4분위는 36%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세대간 재생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행행렬 대각선상 수치)
 - 임금소득의 세대간 계층상향 이동을 보면, 아버지가 1분위 계층이었다가 아들이 2분위로 상승 이동하는 경우는 25%, 3분위로의 이동은 21%, 4분위로의 이동은 18%에 불과
 - 임금소득의 세대간 계층하향 이동을 보면, 아버지가 2분위 계층이었다가 아들이 1분위로 하락하는 경우는 30%, 3분위 계층의 경우는 22%. 4분위 계층이 3분위로 떨어지는 경우는 29%, 2분위로 하향 이동하는 경우는 22%, 12%는 1분위로 하향 이동
- 2008년 조사(김희삼, 2009)에서 세대간 대물림 비율이 29%였던 수치가 2012년 조사에서 32.3%로 높아졌다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세대간 계층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임금의 세대 간 이행행렬, 2008~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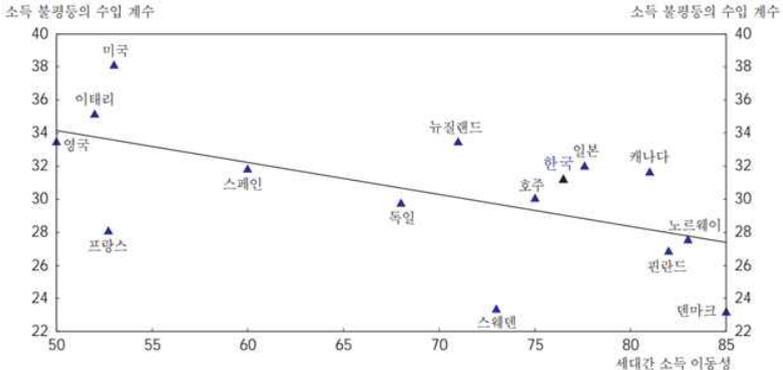
		Son's wage				Total
		1 st quartile	2 nd quartile	3 rd quartile	4 th quartile	
Father's wage	1 st quartile	0.36	0.25	0.21	0.18	1
	2 nd quartile	0.30	0.27	0.20	0.23	1
	3 rd quartile	0.22	0.26	0.29	0.23	1
	4 th quartile	0.12	0.22	0.29	0.36	1

주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98~2012 자료 활용, 아버지의 임금은 1998~2012년 평균, 자녀의 임금은 2008~2012년 평균

출처 : 김희삼(2014),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the role of education in Korea, 한국재정학회 발표문

-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세대간 계층이동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일본, 호주 등과 유사
- 한국은 소득불평등 정도는 중위권 수준이지만 세대간 계층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에 속함
- 미국, 이탈리아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대간 계층이동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계층구조화가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줌. 프랑스는 소득불평등은 작지만 세대간 대물림 정도가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음
-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소득불평등도 낮고 세대간 계층이동성도 매우 높아 형평성과 개방성이 동시에 높은 사회임을 알 수 있음

【 OECD 국가의 세대간 소득이동성 】



출처 :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한국의 경우 세대간 이동성이 높게 나타난 배경에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급속한 변동에 따라 생겨난 높은 '구조적 이동성'(structural mobility)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대부분 농업적 배경을 가진 산업화 이전 세대에 비해 그 다음 세대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부문에서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고 이에 따라 취업기회가 확대된 데서 기인

- 하지만, 향후 세대간 계층 이동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연령변수를 통제해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간 이동성을 본다면, 세대간 이동성이 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2008년과 2012년 조사에서 세대간 이동성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함
- 더 큰 문제는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데에 있음
 -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낮다’는 부정적 견해가 57.9%로 높게 나타남(2013년 기준)

【 본인세대 계층이동(가구주)(%) 】

구분	계	높다			낮다			모름	
			매우	비교적		비교적	매우		
2011년	100.0	28.8	2.1	26.7	58.7	42.9	15.9	12.5	
2013년	100.0	28.2	2.2	26.0	57.9	40.4	17.5	13.9	
계층 인식	상층	100.0	69.2	13.7	55.5	23.8	19.2	4.6	7.0
	중층	100.0	36.9	2.6	34.3	54.6	44.9	9.7	8.5
	하층	100.0	16.9	1.3	15.7	63.0	36.3	26.7	20.1

출처 : 통계청(2013), 사회조사

-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가 39.9%, ‘낮다’가 43.7%로, 본인의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다음세대 계층이동(19세 이상 가구주)(%) 】

구분	계	높다			낮다			모름	
			매우	비교적		비교적	매우		
2011년	100.0	41.7	4.0	37.7	42.9	33.4	9.6	15.4	
2013년	100.0	39.9	3.6	36.3	43.7	34.0	9.8	16.4	
계층 인식	상층	100.0	62.8	13.2	49.7	28.6	21.8	6.8	8.5
	중층	100.0	47.2	4.3	43.0	42.1	35.3	6.9	10.6
	하층	100.0	30.9	2.4	28.4	46.1	33.0	13.1	23.0

출처 : 통계청(2013), 사회조사

Ⅲ. 정책적 시사점

1. 사회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문제점

- ① 최근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계소득과 임금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용잠재력도 떨어지면서 소득분배의 악화가 반복되는 이른바 ‘소득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나타남
 - 고용과 실질소득 증대가 없는 경제구조로 인해 성장잠재력 악화가 초래되고, 고용불안-분배 악화-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를 비롯해 복지와 노동조건 등을 둘러싼 격차가 확대
 -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새로운 빈곤문제와 근로빈곤층 출현, 고용불안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 ③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3배가 넘고 이는 OECD 최고 수준
 - 노인 빈곤문제가 최근 불평등 심화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은퇴 후 삶의 설계를 어렵게 만들고 삶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 ④ 그 동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적 진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정치적 권한 및 경제적 참여와 기회 측면에서 성별격차가 크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일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디딤돌

- ⑤ 우리 사회에서 자산분배 불평등 정도는 소득분배 불평등에 비해 두 배 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불평등 문제가 계층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
- 더욱이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⑥ 소득불평등은 소비생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 지출규모 및 소비패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이는 생활양식의 선택기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초래, 특히 빈곤층의 경우 교육학습 및 여가문화활동 등에 제약을 받거나 모방적 소비를 따라하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게 됨
- ⑦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학업성취에도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격차 현상이 확대됨. 교육이 이전처럼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통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회와 교육성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특히 사교육 지출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고 학업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⑧ 소득계층간 이동은 점차 감소하고 빈곤탈출이 어려워지면서 계층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이동성도 최근에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세대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압축성장에 따른 ‘구조적 이동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추세를 미루어 볼 때 향후 세대간 계층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사회이동성의 약화는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저해하고 불평등 구조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야기해 국민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우리 사회는 과거 동질적이고 동일한 경쟁 기반 위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유지시켜 왔던 통합 메커니즘이 위기를 맞게 된 이후, 사회통합의 새로운 방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전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단순히 빈곤이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 교육, 주거, 생활양식,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과 ‘배제’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음
 - 소득분배 문제는 직업, 산업, 교육, 연령, 성별, 지역 등 수많은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최근의 소득분배 악화에는 고용 악화 및 고용 불안정성 증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교육격차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같은 문제들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인 처방과 패러다임 전환적 접근이 필요
- ① 첫째,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창출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 필요
- 단순히 재정지출을 통한 양적 고용증대는 임시적이고 사후적 처방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임금 단기고용 일자리를 양산할 위험도 있음
 - 고용장려금 확대, 고용세액공제제도 전환, 인적자원 개발투자 등과 같은 고용과 성장을 연계하는 적극적 고용전략을 검토할 필요성 제기
 -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② 둘째, 노인 소득활동 증대 및 일-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과 복지제도 창출 필요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과 여성의 고용잠재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으로, 장시간근로의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통해 노인빈곤 개선과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기업, 국가, 가정, 공동체 환경을 구축
- ③ 셋째, 소득분배 개선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계층상승의 사다리 놓기
- 최근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기회의 평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여전히 교육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매개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가 핵심 목표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과 교육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됨
- ④ 넷째, 개인의 생애기회 관리 능력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정책 필요
- 사후적이고 임시처방적인 사회안전망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 생애주기의 실패가 완전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활과 성공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불안한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동시에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음
- ➔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동시에 개인적·집단적 성취열망을 복돋울 수 있는 경제사회체제를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